

# KWDI 이슈페이퍼

수행과제명 성인지예산제도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연계방안(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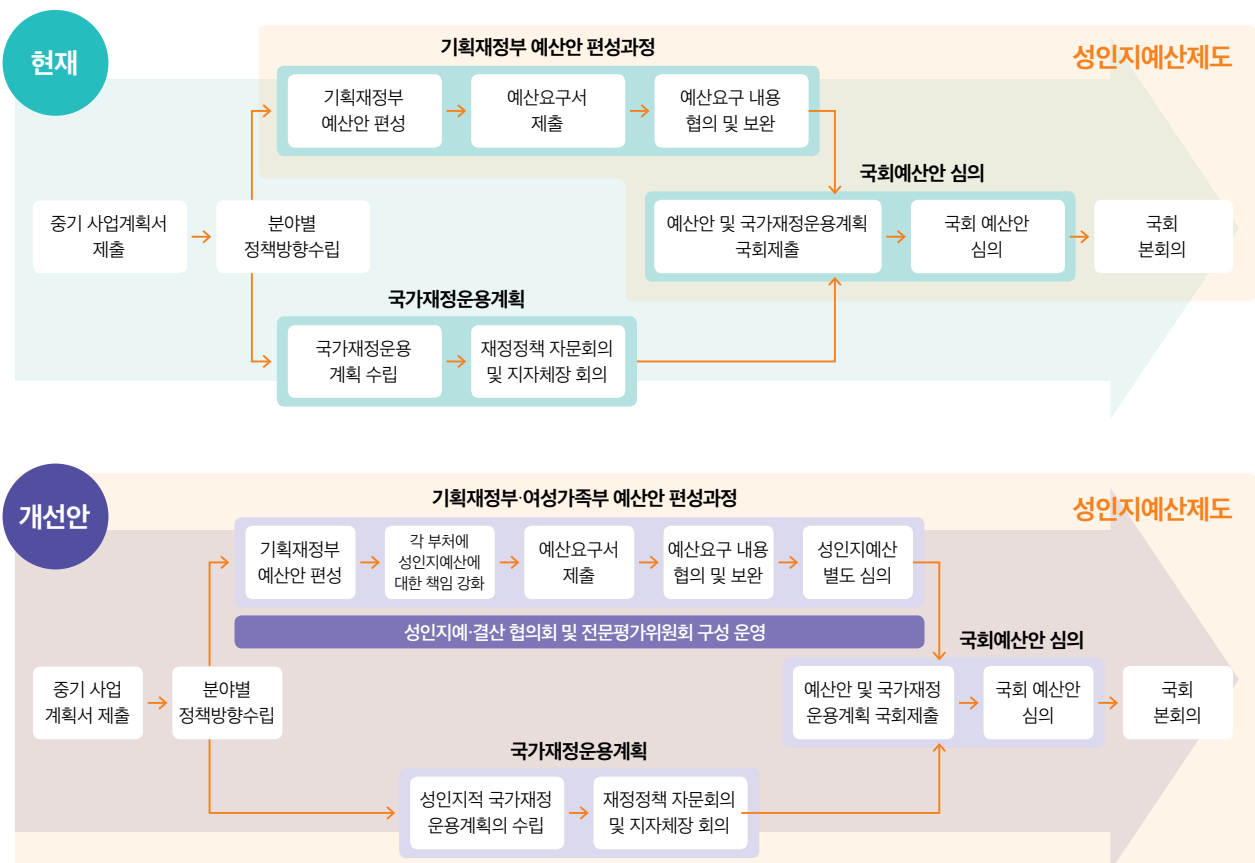
과제책임자 조선주 선임연구위원 (Tel: 02-3156-7109 / E-mail: sjcho@kwdimail.re.kr)

## 성인지예산제도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연계방안

### 초록

-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주요 관심과 논의는 법정서류인 ‘성인지예산서’를 중심으로 전개되어왔으며, 단년도 예산분석에 제한되어 있음. 이는 중기적 시계에서의 재정운용전략과 자원배분의 방향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재정정책 추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운용현황 분석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성인지적 운용을 위해 전문가(여성정책전문가, 재정정책전문가)와 대국민 조사 시행 등의 분석·조사를 통해 다각적인 정책개선(안)을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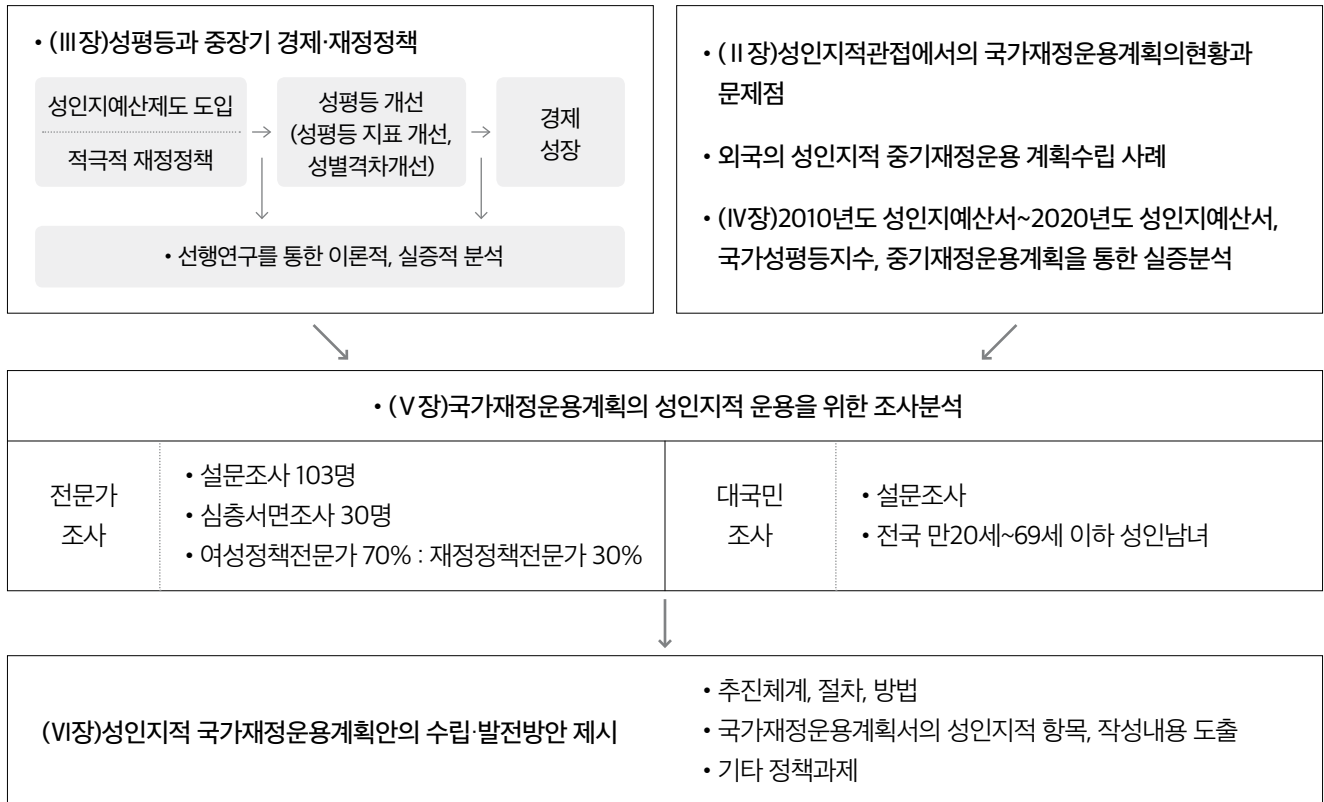
### 예산과정에서의 성인지예산제도 운영 개선안



## 1. 배경 및 문제점

- ①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주요 관심과 논의는 법정서류인 ‘성인지예산서’를 중심으로 전개되어왔으며, 세부사업 중심의 단년도 예산분석에 제한되어옴
  - ▶ 세부사업 중심의 분석은 사업수혜자의 성별 분석에 집중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며, 중기적 시계에서 재정운용 전략과 자원배분의 방향이 제시되고 있지 않아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재정정책의 추진에 영향을 미칠 수 없었음
- ② 예산서란 매년 편성하며, 편성 연도 사업에 대한 재정투입계획을 밝히고, 국회의 심의를 받는 집행의 구속력을 갖는 특징이 있으나, 성인지예산서에는 편성 연도 사업에 대한 재정투입계획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성인지적 관점을 편성 연도 예산에 어떻게 반영하겠다는 재정투입계획’이 없기 때문에 집행의 구속력도 가질 수 없는 실정
  - ▶ 동 사안은 국회에서 여러 번 지적이 있었고 관련한 법안 발의도 있어온 바 차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성인지적 국가재정운용방향이 정립되어 제시될 필요가 있음
- ③ 제도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예산 구조상 현재와 같은 세부사업 수준의 단년도 예산 뿐 아니라 국가재정계획이 성인지적으로 수립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부처별, 사업별 자원배분의 우선순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함
  - ▶ 성장, 일자리, 분배, 저출산 등 사회경제적 영역에서 심각한 성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운용 방향의 수립이 절실하나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음. OECD 또한 성평등 목표를 포함한 정부의 많은 상위 수준의 목표는 다년도 기간을 통해 달성될 수 있으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과 그에 맞는 자원은 중기재정계획에서 표현되는 것이 적절하며 중기 전략적 우선순위와 예산을 긴밀히 연계하는 과정에서 성평등이 반영되어야 함을 주장함
- ④ 이에 본 연구는 재정관리 과정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는 것이 보다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관리와 자원 배분을 가능하게 한다는 실질적 증거를 축적함은 물론, 성평등 가치실현을 위한 국민의 수요를 반영하여 정부가 제한된 재원을 성평등 증진을 위해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성인지예산제도와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연계방안을 도출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음

<그림 1> 연구의 흐름도



## 2. 조사 및 분석결과

- ④ 단년도 예산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바탕으로 편성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성인지적 관점이 부재함. 즉,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성평등 수준 제고를 위한 국가의 의지와 노력을 담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성평등 수준 제고가 미흡한 것을 사업별 설명자료를 담당하는 공무원 개개인에게 전가하고 있는 실정임

<표 1>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체계 및 절차 상의 문제점

현재	구분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문제점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지침 통보	n-1년도 12월-1월	기획재정부는 n-1년도에 작성되는 n년~n+5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지침에 <u>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한 국가재정운용계획(주요 성평등 정책방향 및 재정 투자 계획)수립지침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u>
부처별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n년도 1월 31일	각 부처는 <u>성평등 이슈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주요 성평등 정책방향 및 재정 투자 계획)을 작성하지 않고 있음</u>
n년~n+5년 국가재정운용 계획(시안) 마련 성인지예산 편성 지침 마련	2월	정부, 연구소, 학계,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u>분야별 작업반 구성</u> , 심도 있는 논의. <u>주요 분야에 성평등 또는 성인지예산 전문가 참여 부재</u>
	3월	각 부처가 제출한 <u>n년도 중기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n+1년도 성인지예산 편성 지침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음</u>
국가재정운용계획(시안) 확정 및 부처별 지출한도 결정	4월하순, 5월말	<u>재정전략회의(대통령참석, 국무위원 전원 참석) 개최 시 미반영</u> , 지속가능한 재정운용 전략, 분야별 투자방향은 물론 각종 쟁점사항 등 토론 시 <u>성평등 관련 투자 방향과 쟁점 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하지 않고 있음</u>
n년~n+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보고서 작성	6월- 8월말	n년~n+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보고서 작성 시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내 <u>성평등 관련 투자 방향과 쟁점 사항에 대한 내용이 없음</u>
n년~n+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n+1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확정·국회제출	9월 1일	<u>n년~n+5년의 성인지적 국가재정운용계획은 n+1년도 성인지예산서와 함께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해야 하나, 성인지적 국가재정운용 계획은 부재</u>



## 성평등 중점 사업 작성 기준에 따라 해당 부분을 한정(<표 2>에서 음영처리한 부분)하여 성인지적 관점으로 분석함

<표 2> 201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공공질서·안전 분야

### (11) 공공질서·안전 분야

#### 1) 그동안의 재정투자 분석

국가의 기본적 책무인 사법, 치안 등 법질서 유지와 사회통합, 재난관리 관련 투자는 2014년 16.9조원에서 2018년 19.1조원으로 연평균 4.8% 증가하였다. 공공질서·안전 분야는 국가의 가장 기초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분야로 그간 안정적인 재정지원에 중점을 두고 투자하여 국민 범죄불안 해소, 사회적 계층에 대한 보호·지원 확대 등 안전한 사회 조성에 기여하였다. 특히, 2011년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도입, 112 범죄신고시스템 고도화 등 범죄피해에 대한 보호 강화와 법률조력 강화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 복지분야에 중점 투자해 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재해·재난 예방투자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오고 있다.

<공공질서·안전 분야 재정투자 추이>

	'14	'15	'16	'17	'18	연평균 증가율
* 공공질서·안전 분야(조원)	15.8	16.9	17.5	18.1	19.1	4.8%

\* 본예산 기준

#### ■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강화

2011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설립하여 범죄로 인해 고통받는 범죄피해자에게 범죄피해구조금, 치료비, 긴급생계비, 간병비 등의 다양한 의료·경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스마일센터·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피해자 지원시설을 통해 심리치유, 상담, 법률 조력 등의 서비스를 지원해왔다.

또한, 진술조력인·피해자국선변호사 등의 법률조력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의 수사·재판 참여 지원 및 수사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있으며, 보복범죄 우려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고통받는 피해자에게 이전비·위치추적장치 등 신변보호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피해자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 조력 강화

경제적 어려움으로 소송시 변호인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무료 변론 등 법률구조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서민을 위한 맞춤형 법률복지 서비스인 법률홈닥터 운영, 중소도시 지역 등의 법률 복지 향상을 위한 동(洞)지역 마을변호사의 지속적 확대 등 사회적 취약 계층의 법률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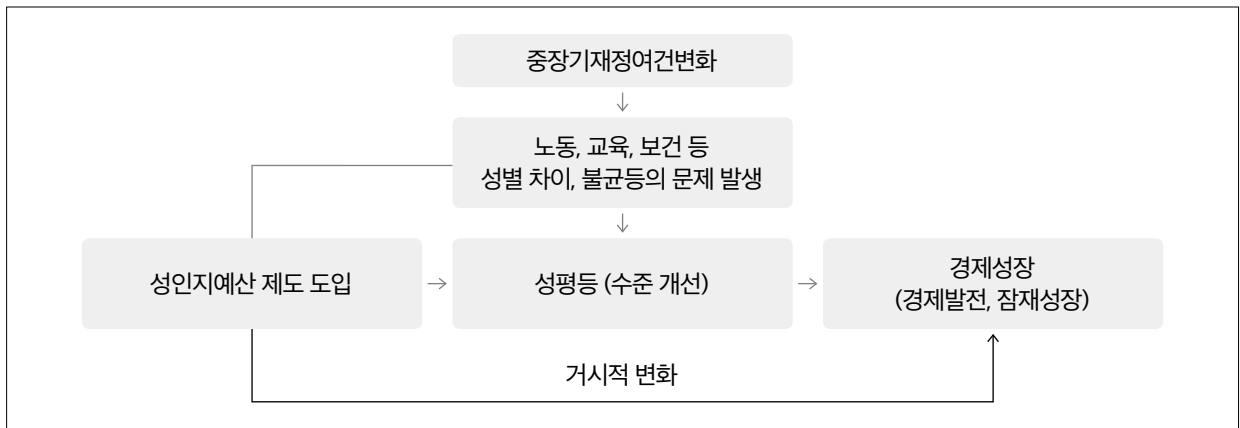
#### ■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감독 강화

성폭력, 약물, 정신질환 등 재범 위험성이 높은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지도 감독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심리상담 치료 프로그램 확대, 경제력이 미약한 경미 범죄 주취·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특정범죄자 위치추적 전자감독시스템 기능 개선, 전자 감독 대상자의 24시간 위치추적 및 비상 경보 시 신속한 출동을 위해 신속대응팀 확대 등 다양한 재범 방지 노력을 기울여왔다.

- 후략 -

- 세계 각국에서는 성평등 수준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도입하고 있는데, 정부의 재정 전반에 성인지적 관점을 도입하기 위한 수단인 성인지예산제도 역시 성평등 수준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수단 중 하나임. 이는 성평등 수준이 높아질수록 경제성장에서 도움이 된다는 다양한 이론적 결과에 근거하고 있으며, 많은 선행연구를 통해 성평등이 경제성장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제시되어 있음. 다만 성인지예산제도의 도입이 경제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다는 성인지예산제도를 통해 성평등 수준을 개선하고 성평등 수준의 개선이 경제의 성장잠재력에 간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는 것이 적절함

<그림 2> 성인지예산제도 도입의 거시적 변화



- 성인지예산제도를 시행하면서 성인지적 중기재정계획제도를 시행하는 국가는 스웨덴이 유일함

<표 3> 스웨덴의 성인지적 중기재정계획서

구분	설명
연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97년부터 스웨덴 예산 편성은 모든 측면에 중기재정계획제도가 적용</li> <li>스웨덴의 중기재정계획제도는 예산 편성의 거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치며 거시 경제 개발, 중앙 정부 수입 및 지출 및 공공 재정에 관한 모든 문제에는 3년 동안의 예측을 포함</li> </ul>
추진체계 및 운용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스웨덴의 중기재정계획은 3년의 운용 시계를 가지며 매년 수정하고 있음. 이에 “춘계재정정책안 (Spring Fiscal Policy Bill)”에 포함되어 있으며 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음.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예산 편성에 있어 실질적으로 구속력 있는 제약으로 운영됨</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b>[N-1년]</b></p> <p>1월</p> <p>2월: 각 정부 부처로부터의 예측 분석</p> <p>3월: 수치 계산, 분석</p> <p>4월: <b>춘계 재정 정책안(중기재정계획서)</b> 제출</p> <p>5월: <b>춘계 재정 정책안(중기재정계획서)</b>에 대한 의회의 결정</p> <p>6월: 예산 프레임워크(체계) 준비</p> <p>7월</p> <p>8월: 정부예산토론 (Harpseud(스웨덴 총리의 휴양지)에서 열리는 대규모 회의)</p> <p>9월: 예산요구서</p> <p>10월</p> <p>11월: 국가 예산에 대한 의회의 프레임워크 결정</p> <p>12월: 규제 서신, 의회가 국가 예산을 취합함</p> </div>

구분	설명
추진체계 및 운용시기	<p>[N년] 1~3월 4월: 춘계 예산 5월: 춘계 예산에 대한 의회의 결정 6~8월 9월: 추계 예산 12월: 추계 예산에 대한 의회의 결정</p> <p>[N년+1년] 1월 2월: 각 정부 부처의 연간 회계 보고서 3월: 스웨덴 국립 감사사무소의 감사 보고서 4월: 국가 연간 보고서</p>
성인지적 중기재정운용계획서의 주요 내용과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스웨덴 정부는 매년 두 가지 주요 예산 문서인 4월 15일 의회에 제출되는 <b>춘계재정정책안(Spring Fiscal Policy Bill, 중기재정계획서)</b>과 9월 20일 의회에 제출되는 <b>예산안</b>을 작성함</li> <li><b>춘계재정정책안</b>은 정부의 거시 경제 평가 및 공공 재정 개발을 제시하고 중장기적으로 재정 정책 및 예산 정책을 개괄함. 이는 사전 예산서(pre-budget statement)의 형태로 볼 수 있음. <b>예산안</b>에서 당해연도에 대한 지출 한도, 세출 분야에 대한 지출 배분 및 다음 회계연도에 대한 지출(프로그램 및 기관의 목표 및 예상 결과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2~3년 이후의 추정 예산을 제시함</li> <li>스웨덴의 중기재정계획안(춘계재정정책안)에는 <b>성평등 관련 지출계획을 찾아볼 수 있으며, 해당 연도의 상황과 경제적 이슈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지출계획이 수립되고 있음</b></li> <li>27개 분야별 지출계획 중 성평등과 관련된 분야로 '13. 양성평등 및 신규 유입 이민자 정책 분야의 자원 배분 계획'이 제시되어 있음</li> </ul>

④ (전문가 조사1)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도입 방안과 정책실현을 위한 중요도를 종합적으로 계산한 결과는 <표 4>, <표 5>와 같음. 정책도입 방안에서는 평등 예산에 대한 각 부처의 중기사업계획서 제출을 바탕으로 분야별 정책방향을 수립하여 재정운용을 예측함(0.221)이 가장 중요하게 나타남. 정책실현을 위한 중요도에서는 지속 가능성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예산 배분의 효율성(성평등성)(0.172)임

<표 4> 정책 대안 종합 중요도

정책 체계도	중요도	순위
사회적 가치(성평등) 실현 요구도 반영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성인지적 재정운용방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보완함	0.185	3
정책의 우선순위 설정 시 성평등 관련 분야에 대한 우선순위 설정 및 예산 확보	0.172	4
단년도 중심의 성인지예산안 편성지침을 보완하는 역할		
기획재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부문 및 분야별 우선 순위 설정과 성과지표 결과의 활용을 강화하여 이에 맞춰 예산 편성함	0.106	6
계획수립의 내실화와 신뢰성 제고		
성인지적인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을 구체화하고, 이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함	0.191	2

정책 체계도	중요도	순위
적용과정에서 구속력 강화와 부처의 자율성 확대 등 검토		
중기사업계획서부터 성인지적인 관점을 적용하므로 각 부처 사업 담당자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함	0.126	5
분야별 예산 배분 및 지출 계획 수립을 통한 재정의 예측 가능성 제고		
성평등 예산에 대한 각 부처의 중기사업계획서 제출을 바탕으로 분야별 정책방향을 수립하여 재정운용을 예측함	0.221	1

<표 5> 평가 기준 종합 중요도

평가 기준	중요도	순위
실행 가능성		
정치적 요인(부처간 문제)	0.132	4
법적요인	0.104	5
행정관리적 요인(실무기관, 담당자 간 문제)	0.092	6
재정적 요인	0.141	2
효과성		
성평등 예산의 증액	0.136	3
예산 배분의 효율성(성평등성)	0.172	1

- ④ (전문가 조사2) 성평등 관련 서비스(성평등 관련 정책) 수준의 변화에 대해서 여성 정책전문가, 재정정책전문가 모두 성평등 관련 서비스(성평등 관련 정책) 수준이 확대 및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함. 아울러 성평등한 복지 국가를 위해서뿐 아니라, 코로나 19와 같은 사회적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됨

<표 6> 성평등 관련 예산 분야의 중요성

구분	재정 12개 분야 중 해당 분야
N번방 문제 등 여성 폭력 근절 관련 예산	공공질서·안전
남녀평등의식과 문화확산 관련 예산	교육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관련 예산	보건·복지·고용
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동 관련 예산	보건·복지·고용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 관련 예산	보건·복지·고용

<표 7> 성평등 관련 정부지출의 이해와 동의 정도

	긍정	부정
여성 전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평등 관련 정부지출이 성평등 인식 확산 및 재원의 공정한 배분에 기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평등 관련 지출의 범위가 불명확하고 형식적인 지출이 많음</li> <li>• 성평등 및 성인지적 관점이 부족하여 목표한 바를 달성하지 못함</li> </ul>
재정 전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평등 관련 정부지출이 정부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시키고 형평성 있는 자원 배분에 기여함</li> <li>• 예산 집행 후 성평등 효과분석에서 성별에 따른 수혜자와 예산 배분을 연계할 수 있고,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성평등 확대라는 목표를 일부 달성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평등 지출이 형식적으로 배분됨</li> <li>• 정책결정권자의 성인지적인 관점의 부족, 한정된 정부 재원으로 인해 성평등 관련 정부 지출의 지속가능성이 낮음</li> </ul>



## (국민 조사)

- ▶ 국가 재정 12개 분야 중 정부의 추가 지출이 필요한 분야: 코로나 이전에는 ‘보건·복지·고용’, ‘산업·중소기업·에너지’, ‘공공질서·안전’ 순으로 나타났으며, 코로나 이후에는 ‘보건·복지·고용’, ‘연구개발’, ‘공공질서·안전’ 순
- ▶ ‘보건·복지·고용’ 분야의 세부 분야 중 추가 지출이 필요한 분야: 코로나 이전, 이후 모두 ‘기초생활보장’

<표 8> 국가 재정 12개 분야 중 정부의 추가 지출이 필요한 분야

조사내용	조사결과
코로나 이전 상황에서 추가 지출이 필요한 분야	1순위 : <b>보건·복지·고용 43.4%</b> - 산업·중소기업·에너지(9.2%) > 공공질서·안전(7.7%) > 국방(7.0%) 등
코로나 이후 상황에서 추가 지출이 필요한 분야	1순위 : <b>보건·복지·고용 63.8%</b> - 연구개발(7.5%) > 공공질서·안전(5.0%) > 국방(4.4%) 등

- ▶ 성 평등 정부지출의 체감 또는 경험: 성 평등 관련 정부지출 체감 또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 17.9%가 경험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체감 분야로는 ‘보육·가족·여성’, ‘유아 및 초등교육’, ‘기초생활보장’ 순으로 나타남
- ▶ 각 이슈별 국가재정 12개 분야 중 해당 분야: 해당 이슈와 관련한 예산이 국가 재정 12개 분야 중 어느 분야에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 아래와 같이 응답함

<표 9> 각 주제별 국가재정 12개 분야 중 해당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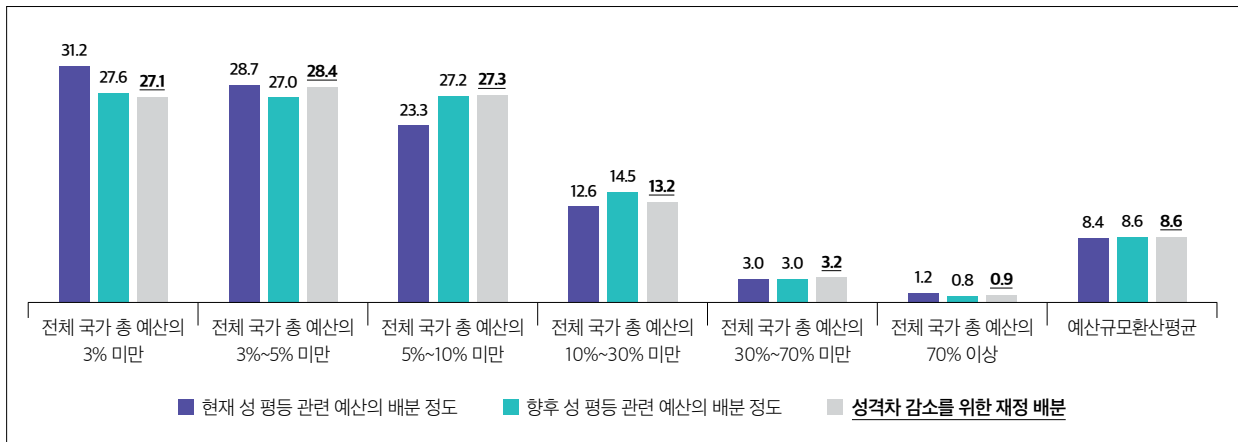
구분	지출 포함 분야
N번방 문제 등 여성 폭력 근절	공공질서·안전 55.8%
남녀평등의식과 문화확산	보건·복지·고용 27.9% > 공공질서·안전 25.8%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보건·복지·고용 56.8%
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동	보건·복지·고용 51.8%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	보건·복지·고용 60.4%



- ▶ 성 평등 관련 예산 배분: 성 평등 관련 예산 배분의 적정 규모는 현재 및 향후 모두 ‘전체 국가 총 예산의 3% 미만’이라는 응답이 각 31.2%, 27.6%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3> 현재 및 향후 성평등 관련 예산의 배분 정도

(N=2,500명, 단위: %)



- ▶ 성 평등 관련 예산 편성 방법: 현재 12개 분야에 걸쳐 편성되어 있는 정부의 성 평등 관련 사업 예산을 편성하기에 적절한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결과, ‘<1안> 지금과 같이 유지하되 12개 분야를 총괄하는 “정책 방향 및 재정투자 중점”에 성 평등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여 각 12개 분야별로 여성과 관련된 예산을 분석가능하도록 함’이 ‘<2안> 13번째 분야로 별도 신설’ 하는 방안보다 더 적절하다고 응답함

### 3. 정책제언



#### 예산과정 내 주요 성평등 정책방향 및 재정 투자 계획의 반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

- ▶ 국가재정운용계획 각각의 단계에 성인지적 관점을 아래 <표 10>과 같이 제시

<표 10>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성인지적 수립 절차(안)

구분	내용
①	n-1년도 12월~1월 기획재정부는 n-1년도에 작성되는 n년~n+5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지침에 <u>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한 국가재정운영계획(주요 성평등 정책방향 및 재정 투자 계획)</u> 수립지침을 마련하여 각 부처에 통보함
②	n년도 1월 각 부처는 <u>성평등 이슈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주요 성평등 정책방향 및 재정 투자 계획)</u> 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1월까지 제출
	2월 정부, 연구소, 학계,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u>분야별 작업반 구성</u> , 심도 있는 논의. <u>주요 분야에 성평등 또는 성인지예산 전문가 1인 필참</u>
③	3월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가 제출한 <u>n년도 중기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n+1년도 성인지예산 편성 지침 통보</u>
	4월하순, 5월말 <u>재정전략회의</u> (대통령참석, 국무위원 전원 참석) 개최, 지속가능한 재정운용 전략, 분야별 투자방향 은 물론 각종 쟁점사항 등 토론 시 <u>성평등 관련 투자 방향과 쟁점 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u>
④	7월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내 <u>성평등 관련 투자 방향과 쟁점 사항</u> 에 대한 국회 보고(기획재정부가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 여성가족부가 여성가족위원회에 보고)
⑤	9월 1일 <u>n년~n+5년의 성인지적 국가재정운용계획은 n+1년도 성인지예산서와 함께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u>



##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과정 전반의 다양한 주체 협력 및 역할 분담

- ▶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성인지적 수립 절차(안)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수립 시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성인지예결산 협의회, 전문평가위원회 간 역할분담을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각 주체별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함



## 국가재정지출의 성 평등한 운용 방안을 위한 연구 활성화 및 대국민 조사 실시 제도화

- ▶ 시기적, 사회적 변화나 이슈가 있을 때, 중장기운용계획에 이러한 사회변화를 성별로 반드시 고려하여 성별 격차를 완화하고 국가성평등 지수를 높이는 방향으로 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국가재정지출의 성 평등한 운용 방안을 위한 대국민 조사 실시를 정례화하는 것이 필요함



## 성인지예·결산협의회 및 전문평가위원회를 통한 성인지 예산제도 운영 결과 보고 시스템 구축

- ▶ 성인지예·결산협의회 및 전문평가위원회를 통한 성인지 예산 편성, 심의, 해당 결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무회의에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이는 성평등을 위한 국가재원의 재배분과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우리사회의 성평등을 제고하고 국가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임



## 성평등 분야 및 예산 분야에 모두 정통한 전문가들의 육성 및 활용, 전문기관 역할 확대

- ▶ 성인지예·결산협의회 및 전문평가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들이 해당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인 조사·연구·평가 또는 컨설팅 등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및 제도화가 필요함



## 각 부처의 성인지적 중기재정운용계획(안) 제시

- ▶ 성인지적 중기재정운용계획안 개선(안)으로 제시함. 중기재정운용계획안이 별도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련 항목에 성인지적 내용이 반영되어야 하며, 각각의 항목마다 성인지적인 관점이 반영되어야 함



##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재정운용 방향, 분야별 투자방향에 성인지적 관점 반영

- ▶ 앞에서 제시한 대로 성인지적 중기재정운용계획안 개선(안)을 적용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예시(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함

<표 11> 성인지적 국가재정운용계획 예시(안)의 일부

### 제 3 부 ▮ 2020~2024년 경제·재정운용 여건

#### 1. 재정운용 기본방향 / 00

##### ■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혁신적 포용국가 성과 확산

금년들어 전례없는 코로나19 위기 확산으로 경제여건이 크게 악화되면서 경제활력 회복 및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다. 앞으로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세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나, 대내외 불확실성 요인이 잠재되어 있는 가운데 경제·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노력도 매우 긴요한 상황이다.

## 중략

### [추가 반영 부분]

성평등에 대해 국민과 공감하고 함께 만들며, 코로나 시대 범부처 중요이슈에 대해 성평등에 대한 의지를 예산으로 실현할 계획이다.

### ■ 과감한 재정혁신을 통해 재정의 효과성·지속가능성 제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부진 등의 영향으로 세입여건은 좋지 못한 상황이다.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다 하면서도 중장기 지속가능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향후 경제회복 추이를 보아가며, 점진적으로 총지출 증가율을 조정하는 한편, 지출 구조조정, 수입기반 확충 등 과감한 재정혁신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 중략

### [수정·보완 부분]

유사·중복 사업 및 관행적 보조사업 등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과 함께 **사회적 가치(성평등)를 반영한** 미래 재정수요 변화 양상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기존의 재정지출 구조를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다부처 협업예산을 재정전반으로 확산하여 부처간 연계·협력을 통해 재정투자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투자성과는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 중략

### [수정·보완 부분]

이와 함께, **재정평가제도, 성인지예산제도** 등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체계를 개편하고, 국가자산종합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국가자산 개념 정립 및 관리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재정정보 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재정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등 재정 관리·운용의 혁신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해 나갈 계획이다.

## 2. 중기 재정전망 및 재정운용 목표 / 00

## 중략

## 3. 분야별 자원배분 방향 / 00

### 1) 기본방향

#### ● 촘촘한 고용·사회안전망 구축·인구구조 변화 대응투자 강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하는 등 고용보험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 의료보장성 강화 및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투자도 확대하여 사회안전망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돌봄과 보육 인프라 구축을 확대하고 기초연금 등 노후 소득기반도 강화할 계획이다.

● 선도형 경제 구현을 위한 미래산업 육성 등 혁신성장 동력 확충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한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BIG3(미래차·바이오·시스템반도체) 등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투자를 확대하고, 수출산업·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기후변화와 환경위기에 대응하여 그린 뉴딜에 집중 투자하는 한편, 디지털 뉴딜을 통해 디지털분야 인재양성과 SOC·교육 인프라의 디지털 전환 등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안보, 감염병 대응, 재난·재해 예방 등 국민안전 투자 지속 확대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하여 방위력을 보강하고, 핵심 기술개발을 통해 국방전력을 고도화하는 데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감염병 대응, 재해 예방 및 신속한 재난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투자도 확대할 계획이다.

[추가반영 부분]

●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 보장,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확대, 여성폭력 근절 등 성평등 사업 투자 확대

고용평등의 기회, 고용현장의 성차별 개선, 노동시장 내 여성지위를 개선하고,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환경 조성 및 대응의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일·생활 균형을 위한 사회기반 조성을 위한 체계 또한 고도화할 계획이다.

중략

## 참고자료

김영옥, 마경희, 김영숙, 이선행, 김효선, 차인순, 김안나, 주소현, 강미선, 이상신, & 윤자영. (2010). 성인지 예산 제도화 방안 연구(IV): 성인지 예산제도 모니터링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개선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선주, 이택면, 김영숙, 박수범, 김효주, 성민정, 권도연, 김병권, 김해람, 안주희, 김수지, 박복순, 우석진, & 추지현. (2019a). 젠더폭력의 현황과 세출예산 분석. 여성가족부.

여성가족위원회. (2018). 2019년도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여성가족위원회.

Downes, R., Von Trapp, L., & Nicol, S. (2017). Gender budgeting in OECD countries. OECD Journal on Budgeting, 16(3), 71-107.

기획재정부. (2019b).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내용. 기획재정부.

대한민국정부. (2019a).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대한민국정부.

Regeringskansliet, Den statliga budgetprocessen steg för steg 홈페이지<https://www.regeringen.se/sveriges-regering/finansdepartementet/statens-budget/budgetprocessen-steg-for-steg/> 인출일자: 2020.09.02.(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0a). 내부자료("국가재정운용계획의 성인지적 운용 방안 전문가 조사" 원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0b). 내부자료("국가재정지출의 성 평등한 운용 방안 조사" 원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대한민국정부. (2020).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대한민국정부.

주관부처: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

관계부처: 전 중앙행정기관